

# 이재명, 본격 대선 레이스... 당내 갈등·대장동 '발목' 잡나

與 경선 갈등 일단락 됐지만 당원·지지자 통합 과제 여전  
文과 회동시 긍정 영향 전망  
대장동 의혹 국감서 전면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후 대선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최종 누적득표율 50.29%,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뜻하지 않게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결선투표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지만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후보 측의 특별당규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정통성을 확보했다. 게다가 이낙연 후보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과 경선 기간 중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던 설총 의원의 '원팀' 선언은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원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명분도 쌓았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이번에는 조각조각 갈라진 민주당 지지층의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무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원팀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성향이 강한 당원과 지지들은 법원에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만6000여 명의 권리당원 및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대표한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 씨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낙연 후보의 당무위 결과에 대한 수용 선언은 정치적인 영역"이라며 "우리는 경선에 정당하게 참여했는데 법적으로 문

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제소는 100%는 아니지만 논의하는 중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면담은 문 대통령의 대외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중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 자체가 이 후보를 비토하는 당원과 지지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한자리에 모여 단합의 모습을 보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방안이다. 실제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와 함께 '호프 미팅'을 통해 지지자들의 갈등을 봉합시킨 바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씻어내는 것도 과제다. 검경에서도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대상으로 과상공세 중이며 이에 민주당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의힘을 되려 압박하는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이 후보가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이후 지사직 사퇴를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간 국감에 출석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을 공격으로 맞받아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반증하듯 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국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정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큰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행안위 국감이 정점으로 변질되는 부분에 우리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통해 토지개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당에서도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잘못되고 부풀려지게 알려진 부분을 생중계되는 국감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이재명은 합니까'라는 모습을 국민께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文,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 협력' 강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회의  
정부, 초광역권 정의·지원 마련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 재정 지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도지사, 경북 부지사, 경남·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측 관계자와 자치분권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부산·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부·울·경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 혁신 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 중점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혁신 선순환 모델 구축을 사례로 소개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의 글로벌 관문 조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목표로 소개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초광역권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등에 초광역권 계획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국고보조율 상향(50→60%)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원 계정 내 '초광역 협력 사업군'도 선정해 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강화한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의 행·재정적 지원 및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대장동 특검수용"... 국민의힘 '장외투쟁'

이준석 대표, 피켓 들고 도보행진  
당 지도부도 지난주부터 천막 농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치 공간이 좁아진 만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청와대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남 지역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린 11일 광주 5·18광장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걸어가며 시민에게 '대장동 특검 도입'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장동 특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에 나섰고, 김미애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앞에 도착해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지난 7일엔 광주에서, 14일엔 성남시청을 찾아 열면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행보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많이 이끌고 있다"며 "저도 다만 당대표로서 도보 투쟁 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도보 투쟁 때는 광주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줘서 '광주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별 거점별로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준석 대표의 장외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오는 16일에 이 대표가 마산에서 열리는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서 도보 투쟁을 할 것이고 4강 TV토론회가 있는 18일에도 부산에서 도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장의 투쟁뿐만 아니라 삼임위 국정감사, 오늘(14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